
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

2025. 10.

중소벤처기업부

순서

I.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경영여건	1
II. 기존 정책의 한계 및 추진방향	2
III.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	4
1.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	5
2. 부실 ·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 종합지원	7
3.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기회 확대	9
4.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..	12
IV. 향후 추진일정	16

I. 소상공인·자영업자 경영여건

□ 소상공인 과당경쟁 지속, 내수침체 등에 따라 경영애로 심화

- 소상공인 지속 증가*, 도·소매, 음식숙박업 집중** 등 과당경쟁 심화

* 소상공인 현황 : ('20) 692만개 ('21) 734만개 ('22) 766만개 ('23) 791만개

** 도·소매, 음식숙박업 비중 : ('20) 36.1% ('21) 36.5% ('22) 37.2% ('23) 37.3%

-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자영업 비중, 과당경쟁으로 생존장벽 높음

* OECD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(% , '23년): (韓)23.2 (佛)12.9 (日)9.5 (獨)8.6 (美)6.1

- 한계 소상공인의 질서있는 퇴장 및 구조개선에 대한 현장 요구 多

- 내수회복 지연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*, 소상공인 체감경기 부진

* 매출액 : ('22) 2.33억원 ('23) 1.99억원 / 영업이익 : ('22) 31백만원 ('23) 25백만원

□ 부채부담 등으로 취약차주 늘어나고, 소상공인 폐업 증가 추세

- '25.2분기 대출잔액 1,069.6조원, 코로나 이후 큰 폭 증가 후 최근 둔화,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, 취약차주 중심 높은 연체율 지속

* 대출잔액(조원 2분기) : ('20) 756.2 ('21) 858.4 ('22) 994.2 ('23) 1,043.2 ('24) 1,060.1 ('25) 1,069.6

* 전체/취약차주 연체율(%) : **(22.4Q) 0.69/5.40** → ('23.4Q) 1.22/8.90 → **(24.4Q) 1.67/11.16**

- '24년 사업자 폐업 약 100만개,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 증가

* 사업자 폐업 수(만개) : **(20) 89.5** → ('21) 88.5 → ('22) 86.7 → ('23) 98.6 → **(24) 100.8**

* 개인회생 신청(만건) : **(20) 8.7** → ('21) 8.1 → ('22) 9.0 → ('23) 12.1 → **(24) 12.9**

- 한편, 폐업지연으로 대출증가·다중채무 등 부실 확대 우려 의견도 有

자영업자 대출 연체율



전체 사업자 폐업



II. 기존 정책한계 및 추진방향

□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한계상태 영업지속 및 정보 사각지대 문제

- 기존에 1)재기지원·채무조정은 폐업·부실확대 이후, 2)당사자 신청에 의해 사후적 개입 중심으로 운영
- 소상공인은 폐업 시점 결정에 어려움을 겪으며, 한계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추정
 - * 폐업 애로사항(24년 소잔공, %) : 대출금 상환 49.5% **폐업시점 결정 47.1%** 점포정리 비용 43.9%
- 상당수는 제도인지 부족 등 이유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못함
 - * 폐업 실태조사(중기중앙회, '25.5) : 폐업 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은 비율 78.2%
 -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: 알지 못해서 66.9% 신청방법 등 까다로워서 21.4%

▶ 한계상태 영업지속으로 부실 확대 우려, 선제적 안내 등 지원 강화 필요

□ 그간 각 부처의 분절적 지원으로, 온전한 경제활동 복귀 미흡

- 재기지원은 부실진단부터 경제활동 복귀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나 다수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지원*
 - * 경영개선, 폐업, 취업·재창업 등 재기 지원 → 중기부 / 채무조정 → 신복위, 법원 등
 - 단계별 정책 연계 부족으로 채무조정 실효율* 증가 등 악순환
 - * 조정결과에 따른 상환을 4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효력 상실
- 한편, 소상공인은 여러 기관의 정부지원을 확인하고 기관별로 정부지원을 신청·접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음
 - 또한, 폐업 전반에 대해 어디서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의견 有

현장의 목소리

- 채무조정, 자금·보증, 컨설팅 등 많은 지원사업이 있으나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서 파악이 어렵고 도움받기 곤란 (소상공인간담회, '25.7)

▶ 재기지원·채무조정을 연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강화 필요

□ 폐업 단계의 어려움 호소, 회전문 창업 등 반복 실패 문제

- 폐업 후 대안 부재 또는 대출금 상환부담 등 이유로 시간 소요, 폐업 결심 후 실제 폐업까지 평균 1.4년 소요(중기중앙회 실태조사)
- * 폐업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('25, 중기중앙회) :
대안부재 51%, 인수자 찾는기간 46.1%, 대출금 부담 37%, 폐업절차 알아보는 기간 27.6%
- 한편, 폐업 이후 다른 대안 부족으로 다시 재창업하고 폐업-창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 사례도 상당수
- * (사례) 음식점→카페→분식점 등 반복 창·폐업으로 부채 누적과 경영악화 심화

▣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시장 퇴출, 임금근로자 전환 활성화 및 준비된 재창업 지원 등을 강화하여 재기기회를 확대할 필요

□ 폐업·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소상공인 안전망 미흡

- 근로자에 비해 부족한 안전망으로 폐업 후 충격 완화 역할 부족
- * 노란우산공제 가입(183만명) 외 고용(5만명)·산재보험(4만명) 가입 저조 등

< 소상공인 VS 임금근로자 안전망 비교 >

구분	퇴직금	고용보험	산재보험
소상공인 (23. 791만개)	노란우산공제 (183만명)	임의가입 (5만명)	임의가입 (4만명)
임금근로 일자리 (25.1Q, 약 2천만개)	의무 (대부분)	의무가입 (대부분)	의무가입 (대부분)

- 또한, 재난안전망 관련 소상공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견 多

* 농림어업과 달리 피해복구 지원 부재, 금융(융자) 중심 지원으로 어려움 호소

현장의 목소리

- 경북도 산불 피해 시, 대출중심 지원으로 소상공인은 복구비·철거비 등 부족 호소('25.4)

▣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소상공인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

Ⅲ.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

【 목 표 】

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회복 · 안전망 구축

【 기본 방향 】

- ◇ 위기 확대 전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
- ◇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을 강화
- ◇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

분야	추진 과제
1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	1 전체 대출 소상공인 모니터링 및 위기 조기포착 2 위기 확대 전, 경영진단부터 재기정책까지 연계
2 부실·폐업 소상공인 재기 종합지원	1 재기지원-채무조정 원스톱 지원 강화 2 현장 종합지원 거점 운영 및 상담지원 강화
3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 기회 확대	1 폐업 부담 획기적 완화 및 심리회복 지원 2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지원 강화 3 준비된 재창업자 선별 강화 및 두터운 지원
4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	1 폐업 충격 완화를 위한 제도정비 2 재난·화재 등 예기치 못한 위험 대비 강화 3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 확대

1.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

1 전체 대출 소상공인 모니터링 및 위기 조기포착

현장의 목소리

-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에게 미리 위기를 알려주고, 패키지 지원 건의(소상공인연합회장, '25.7)
- 연체부실로 채무조정 받고 있는데, 이렇게 되기 전에 정부역할 필요(간담회, '25.7)
- 부실이 상당 수준 확대 후 사업을 정리하여 재기 어려움, 사회적 비용 증가(컨설턴트, '25.7)

기존			개선		
• 생업에 바빠 본인 위기징후를 모르는 경우 有, 정부지원을 모르는 경우 다수			• 데이터 기반 위기징후 소상공인 포착 및 선제적 정책 안내		
매출 감소	⇒	연체·폐업	⇒	정부지원 신청	
			→		
			• 데이터 기반 위기징후 소상공인 포착 및 선제적 정책 안내		
위기징후 모니터링	⇒	위기징후 포착	⇒	현 상황, 정책 안내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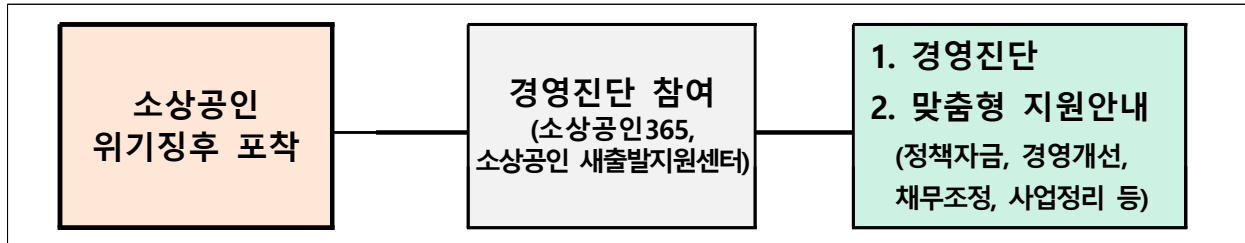
□ 전체 대출 소상공인 대상 위기징후 모니터링 중기부

- 전체 대출 소상공인(약 300만명) 대상 위기징후 포착을 위해, 대출·신용정보 등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(~'26.5)
 - * 정책금융기관 등의 기존 채권관리 조직·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진
 - * 전체차주(약 300만명, 한은) : 소진공·지신보(대출차주 약 200만명)와 민간은행 등 협업
- 정책금융기관(소진공·지신보 등) 및 은행권 협의를 통해 대출·신용정보 등 활용한 '위기징후 알람모형(안)' 마련
 - 매출액 감소, 신용점수 하락, 연체발생 등 세부기준 마련

□ 위기징후 발견 및 경영진단 참여 안내 중기부

- 사전대응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등 위해, 정책금융기관(소진공·지신보 등) 및 은행권 협업 '모니터링-발견-안내' 상시화('26.7)
 - *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(1.88%, '25.1Q), 채무조정 신청건 등 고려 연간 10만명 내외 안내 예상
 - * ('26. 상반기) 정책금융기관 중심 모니터링 시범 운영, (7월~) 본격 운영
- 위기징후가 발견된 소상공인에 각 기관이 알림톡*을 보내 위기징후 사실을 안내하고, 필요정책 연계 등 위한 경영진단 참여 독려
 - * 위기징후 정보, 소진공 '소상공인365(온라인) 또는 소상공인새출발지원센터(오프라인) 경영진단 방법 등

2 위기 확대 전, 경영진단부터 재기정책까지 연계



□ 온·오프라인을 통한 상시 경영진단 강화 중기부

- 소상공인365(경영진단 등 제공/ 온라인 플랫폼) 기능 개선을 통해, 확인된 위기 소상공인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경영진단 서비스 제공(‘26.7)
 - * 경영진단 등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진단 컨설턴트(400명) 대상 개선의견 수렴 (~’25.)
- 상권(읍면동, 시군구) 내 동일업종 대비 상대평가 정보 제공 강화
 - * 지역(읍면동, 시군구) 동종 업종 대비 매출(월·분기·연) 수준 등
- 빅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유동인구·경쟁강도 등 다양한 정보 제공
-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(소진공, 78개소 확대, 연 2~3만명)에서 소상공인365 진단 지원(‘26.7)
- ‘26년에 일부 정책자금 중심으로 사전 경영진단 시범 도입, 장기적으로 소진공 지원사업에 확대 적용 검토(‘26)

□ 경영진단 후 맞춤형 정책 지원 안내 중기부

- 소상공인365 진단 후 맞춤형 정책(자금, 재기지원, 채무조정 등) 안내(‘26.7)
 - 진단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 안내 기능 구현
 - * (예시) 폐업 희망 시, 희망리턴패키지와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, 채무조정 등 정책 안내
- 또한, 심화상담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전문가 대면진단(최대 1천명) 지원(‘26.7)

2. 부실·폐업 소상공인에 재기 종합지원

현장의 목소리

-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포괄하여 안내하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.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막상 어디로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다.(25.5, 소상공인 간담회)

1 재기지원-채무조정 원스톱 지원 강화

□ 재기지원·채무조정 등 복합지원 체계 구축 중기부·금융위

- 재기지원 상담 시 다른기관 지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, 재기지원·채무조정 등 복합지원 시스템 운영 확대*(26.7)
 - * '금융·채무조정·복지·취업' 복합지원 시스템(금융위 등)과 재기지원(중기부) 시스템 연계
- 상담 과정에서 타 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, 당사자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기관에서 연락 후 상담 진행
 - * (예시) 소진공에서 재기지원 상담을 받은 소상공인이 신복위 채무조정도 필요한 경우, 신복위에 정보를 전달하여 신복위에서 해당 소상공인 연락 후 상담 진행
- 추가로, 한번 방문으로 재기지원·채무조정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관협력을 통한 통합창구 운영 검토(26.)

□ 재기 소상공인에 개인회생·파산 연계지원 확대 중기부·법원

-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·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, 패스트트랙 운영 등 중기부-법원 협력 확대*(25.~)
 - * 서울회생법원(25.5), 수원회생법원(25.10, 예정) 업무협약 체결/ 전국 법원까지 단계적 확대
- 중기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변제계획 설계 등 채무조정 절차 지원, 법원 전담재판부를 통해 기관을 통해 접수된 건 신속 처리

<중기부 회생·파산절차 지원 세부내용>

자산·채무파악	신청서류검토	행정비용지원	신청 및 완주지원
▶ 심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 ▶ 자산·채무 증빙 서류제출(소상공인)	▶ 법원신청서류의 면밀한 검토·보완	▶ 파산관재인 비용, 인지세, 송달료 등 제반비용지원	▶ 법원에 패스트트랙으로 접수·신청 ▶ 회생파산 완주 및 재기지원

2 현장 종합지원 거점 운영 및 상담지원 강화

구분	기존	개선
오프라인	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(30개소) 지원사업 신청·접수 및 안내 중심	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(78개소) 경영진단 및 정책 안내 폐업·재기지원, 채무조정 재창업 교육
온라인	1357 콜센터에서 소상공인 상담	AI 도우미 + 1357 콜센터 등 상담 강화

□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(소진공) 통한 종합 안내·지원 중기부

*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채무조정 지원 등 위해, 전국 30개소 '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' 운영

- 폐업·위기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'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' 기능 강화(26.1)
- 경영위기, 폐업·재기 관련 종합상담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및 인력 보강, 새출발지원센터 확대(30개소→78개소) 등 추진

* 신용회복위원회(채무조정) 등 타 기관과 상호 교육을 실시하여 기초 종합상담 역량 제고

- ▶ (경영개선) 위기 소상공인 대상 경영진단, 맞춤형 정책 연계
- ▶ (채무조정·재기지원) 임대차·세무 등 폐업 절차 안내 및 재기지원 정책 연계, 재기지원·채무조정 통합지원
- ▶ (재창업) 지역별 상권 및 과밀정도 분석, 사업자등록·인허가 등 행정절차 교육,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



□ AI 활용 소상공인 종합상담 고도화 중기부

- 소상공인 상담서비스의 질적·양적 수준을 높이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, "소상공인 AI 도우미" 구축·운영('26. 下, '26. 정부안 50억원)

* 소상공인의 민원 상담 데이터를 AI 기반 분석 → 자동화된 서비스 응대

- 상담·전문지식을 반복 학습시켜 정확성과 품질 지속 개선·고도화
- 특히, 재기지원·채무조정 관련 법률·정책 등 전문지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상담 신뢰도 향상

※ 향후, 소상공인에 원스톱-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주요 채널로 활용 추진

3.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 기회 확대

1 폐업 부담 획기적 완화 및 심리회복 지원

□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강화 중기부 · 기재부

-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한도 상향('26 정부안 600만원)
* 최근 3개년('22~'24년) 평균비용 : 폐기 & 원상복구(774만원) / '25년 최대 400 → 600만원 (2차추경)
- 점포철거비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('26.1~)
* (기존) 철거비 관련 서류 + 행정정보기반 서류(사업자등록증, 부가세증명원 등) 7종 제출
→ (개선) 철거비 관련 외에,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(소상공인24) 가능한 서류 제출 불필요

□ 폐업 이후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중기부

※ 폐업시 필요한 정부정책 1위(51%) : 대출금 상환유예·이자감면 <'25, 중기중앙회 실태조사>

- 정책자금 차주가 폐업하더라도 당초 상환 스케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대출 일시상환 부담 완화 제도 현장 안착('25.7~)
* '25.1월 「소상공인법」 개정 완료, '25.7월부터 시행
- 폐업 시 기존 사업자 보증(지신보)을 신규 개인 보증으로 전환, 최대 15년 장기분할상환 및 저금리 지원('25.9~)
* (기존) 브릿지보증 : 상환기간 연장(7년), 보증료감면 無
→ (개선) 폐업 분할상환 보증 : 상환기간 연장(15년), 보증료 전액 지원

□ 폐업 · 재기 단계별 심리회복 지원 확대 중기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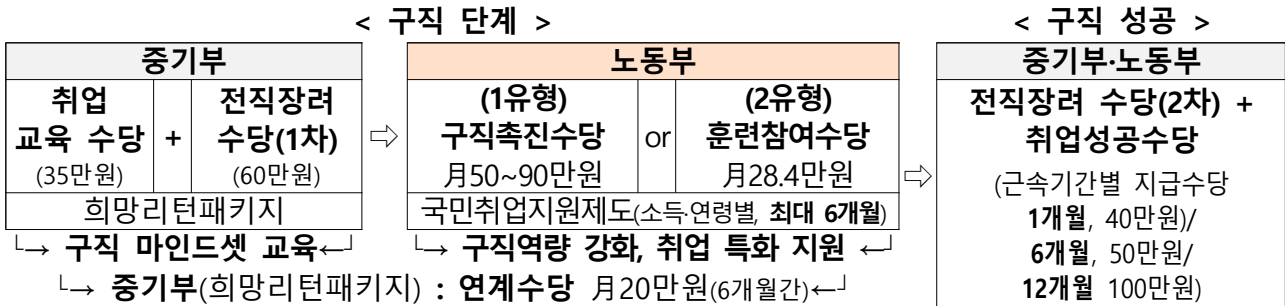
- 폐업 단계에서 소상공인의 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해 심리상담사의 심리진단·상담 등 운영(최대 1.2만명, '26)
-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프로그램(산림청 협업)을 정규사업화하고, 취업 희망자에서 재창업 희망자까지 대상 확대(1만명, '26)
* ('25년) 취업 부분 시범 도입(5천명) → ('26년) 재기사업화까지 확대 및 정규화(1만명)

2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지원 강화

□ 폐업 후 취업 지원 강화 중기부·노동부

- 국민취업지원제도 노동부 연계,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확대*('25. 2천명→'26. 정부안 3천명)

< 희망리턴패키지+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절차 >



- 폐업지원·취업교육(중기부) 받은 중장년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
촉진을 위해, 노동부 협업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 제공('26)

* 중장년 경력지원제(노동부) : 중장년에 1~3개월간 유망분야(전기, 소방 등) 등 일경험수당 월 150만원

- 폐업 소상공인 취업 성공 및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,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기업인력애로센터) 등 연계 대규모 매칭데이 추진('25.11~12)

* 연령별·업종별 등 맞춤형 구인·구직 매칭을 통해 채용 활성화 지원

- 폐업 소상공인 고용 활성화 위해, '희망리턴패키지 참여 소상공인'
채용 후 고용유지(6개월 이상)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* 지급('25.9~)

* (노동부) 채용 후 6~12개월 시점에 지급(연간 우선지원대상 기업 등 720만원, 대규모 기업 360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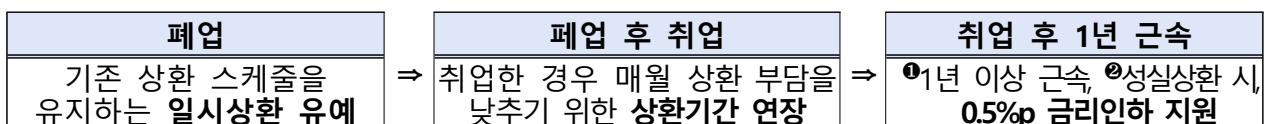
□ 임금근로자 전환 인센티브 강화 중기부

- 폐업 후 취업·근속 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 지원('26~)

* '26년 정책자금에 반영하고, 대상자는 '25년 이후 폐업자로 적용

-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상환기간 연장 지원
- 취업 후 '1년 이상 근속 및 성실상환' 시 금리인하(0.5%p) 지원(직접대출)

< 폐업 소상공인 임금근로자 전환 후 정책자금 채무부담 완화 절차 >



3 준비된 재창업자 선별 강화 및 두터운 지원

*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('25. 807억원) : 전담PM 멘토링(10회), 사업화자금(최대 2천만원) 등 지원

□ 재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재기사업화 고도화 중기부

- 회전문 창업 및 반복된 폐업 방지를 위해, 지원 대상자 평가항목(사업계획 등)에 경쟁강도 등 추가*하여 선별 강화('26)

* (기존) 아이디어, 계획의 적절성, 대표역량 등 → (개선) 상권분석 결과 등 경쟁강도 추가

- 재창업 소상공인 경영실적(매출증감 등) 활용 전담PM 성과관리 강화*('26~)

* 성과평가 결과 상위권(20% 이내) 활동연장 및 하위권(30% 이내) 참여제한 등

□ 재기사업화 선별된 소상공인에 두터운 지원 중기부

- 재창업 소상공인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기사업화 사업화자금(최대 2천만원, 보조금) 자부담 비율 축소*('26)

* (기존) 100%, 최대 2천만원 → (개선) 50%, 최대 1천만원

- 재창업 초기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, 사업화자금(최대 2천만원, 보조금)에 추가로 재도전특별자금(최대 1억원, 융자) 공급('25.11~)

* (기존 : 창업 첫해 최대 2천만원) 재기사업화 종료 후 차년도에 재도전특별자금 지원
(개선 : 창업 첫해, 최대 1억 2천만원) 재기사업화 과정(창업 직후)에서 재도전특별자금 지원

- 새출발기금 공공정보(채무조정정보) 등록 소상공인까지 재기사업화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 확대*('26)

* (~'24) 공공정보 등록자 참여제한 → ('25년) 시범지원 → ('26) 정규 지원대상

□ 성공한 재창업자의 도약을 위한 정책금융 강화 중기부

- 성실상환(최근 3년)하고 성장하는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해 '재도전 특별자금 도약형' (최대 2억원, 소진공) 추가 공급('26)

* (현행) 일반형(재창업 등) 7천만원, 희망형(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 등) 1억원
→ (신설) 도약형 최대 2억원 (성실상환(최근 3년) & 원금상환 중 & 성장 소상공인)

-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규보증에 제한되었던 재창업기업·대표자에 대해 신규보증에 가능하도록 개선(기보·지신보)

* (현행) 법적으로 채무가 종결된 폐업기업의 대표가 재창업한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제한 → (개선) 재창업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에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

4.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

1 폐업 충격 완화를 위한 제도정비

□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중기부·노동부

-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, 고용보험료 지원 (최대 80%, 5년)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('24. 약 3만 → '26.정부안 약 4.2만)
-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은 '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' 개선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중기부·노동부 등 운영('25.11~)
 - *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저조(약 5만명, 전체 1% 미만) 등 관련 현장 의견수렴 및 과제 검토
- 실태파악 등 위한 정책연구,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선 방안 등 검토

현장의 목소리

- 자영업자 고용보험 받는 조건 까다로워서... 안하는게 좋죠(카페 "아프니까 사장이다")
- 서류를 몇십장 제출했는데 몇 번 재첨부 요구 받다가 결국 거부당했어요(카페 "아프니까 사장이다")

□ 노란우산공제 부담 완화 및 혜택 강화 중기부·기재부

- ※ (노란우산공제 개요) 폐업·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을 위한 소기업·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 운영
- 경영악화로 공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 추진('26.7)
 - *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해 기타소득 대신 세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장기납입자 경영악화 요건 완화
 - (현행) 직전 3년 대비 수입금액 50% 이상 감소 → (개선) 20% 이상 감소
- 공제 납입한도를 상향하여 목돈마련 지원 및 경영 안전망 강화('26.7)
 - 기존 '분기별 300만원'인 납입한도를 '연 1,800만원*'으로 확대(분기납→연납)
 - * 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의 연 납입한도 1,800만원 수준
- 고소득 소상공인 대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 방안 등 검토(~'26)

현장의 목소리

- 기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(월 5~100만원)가 낮아 공제금이 도움이 안됐다는 의견 有

2 재난·화재 등 예기치 못한 위험 대비 강화

□ 재난·화재 등 안전망 강화 중기부·행안부·기재부

- 기존 정책대출 중심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, 재난피해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세부기준을 법령에 마련('25.11)
 - * 「재난안전법」에 '시설복구 및 경영안정' 지원 근거 마련('25.4 개정, 11월 시행), 연구용역 결과(중기부, 7.8 完) 등 세부기준 협의 및 대통령령 개정(행안부, ~11월)
 - * (기존) 융자, 생계비 지원(300만원) → (개선)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추가
-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·풍수해 예방 집중 점검, 폭염 등 전반적인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* 조치('26)
 - * 폭염 이동식 냉풍기, 쿨링포그, 화재 AI 화재감지 CCTV 등
- 전통시장 화재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*(전북 전주시) 등 전국 확대 도입 지원('26~)
 - * 전자지도 구축을 통해 정확한 사고위치 확인, 출동시스템 연계로 최단경로 안내
- 화재공제 가입대상을 '전통시장'에 더해 '화재취약 상점가·골목상권'으로 확대('27~, 전통시장법 개정)하고 공제 보장한도*('25.下~) 상향
 - * (보장한도) 6천만원 → 최대 1억원
- 행정안전부·소상공인연합회·전국상인연합회 등 협업 통해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·화재공제 홍보 강화('26)

3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 확대

□ 성실상환 소상공인 정책금융 인센티브 강화 중기부

- 성실상환자 장기분할상환(7년)·금리인하(1%p) 특례 지원^{2차추경}(‘25.7~)
 - (정책자금) 소상공인 정책자금(소진공) 직접대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최대 7년 추가 분할상환 및 1%p 금리감면 지원
 - * 대출잔액 3천만원 가정시, 월 원금상환 부담 83만원 → 최대 21만원으로 완화
 - 추가 정책자금 신청시, 우대금리 확대($\Delta 0.1\%p \rightarrow \Delta 0.3\%p$) 지원 횟수를 추가 1회(5년 내 3회 → 4회) 지원 기회 부여
 - (보증) 지신보 보증부대출에 분할상환(7년) 및 금리감면(1%p) 지원

< 전환보증 vs 분할상환 보증 >

구분	전환보증	분할상환 보증
지원대상	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이용	<u>‘20.4~’25.6월 기간 사업 영위, 같은 기간 중 지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(성실상환 중인 경영애로 소상공인)</u>
지원내용	상환 기간 연장 (5년)	상환 기간 연장 (7년)
금리우대	없음	CD + 1.8% 기준 금리에서 1%p 이자 추가 감면

□ 정책금융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 도입 중기부 · 금융위

- 영세·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, 기존의 신용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 도입
 - 창업 초기 매출이 확인되지 않아(국세청 신고매출 無)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사 매출데이터 활용 평가 모형 시범 적용(‘26.9)
 - * 카드 매출 활용한 대체수단(여신협회 마련예정)을 소진공 특별경영안정자금(신용취약)에 적용

- 금융정보 기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,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가모형에 대안평가* 도입·활용('26)

*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'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(SCB)' 등 활용 검토

□ 회수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의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 중기부

- 회수불가능한 채권(상각 등)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중단하여 '채무자의 영구적 낙인화' 대신 건전한 재기 유도('26.3, 소진공)
- 면책채권에 대한 시효연장 조치 중단, 장기연체채권도 시효도래 시점의 회복가능성을 판단하여 시효연장 여부 결정

□ 영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중기부

-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과금(전기, 가스, 수도요금), 4대 보험료, 통신비 등에 사용가능한 '경영안정 바우처' 신설('26)
- * '25년 추경사업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운영 → '26년 정부예산안 반영
- 연매출 1.04억원 미만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공과금 등 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(25만원) 지원(약 230만명, 정부안 약 5,790억원)

□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지속 중기부 · 기재부

- 착한임대인(임대료 인하) 세제지원 일몰 연장('25→'28)하여 부담완화('25.下)

IV. 향후 추진일정

추진과제	소관부처		추진 일정
	(주관)	(협조)	
1.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			
1. 전체 대출 소상공인 모니터링 및 위기 조기포착			
- 전체 대출 소상공인 대상 위기징후 모니터링	중기부		~'26.5
- 위기징후 발견 및 경영진단 참여 안내	중기부		'26.7
2. 위기 확대 전, 경영진단부터 재기정책까지 연계			
- 온·오프라인을 통한 상시 경영진단 강화	중기부		'26.7
- 경영진단 후 맞춤형 정책 지원까지 연계	중기부		'26.7
2. 부실·폐업 소상공인에 재기 종합지원			
1. 재기지원-채무조정 원스톱 지원 강화			
- 재기지원·채무조정 등 복합지원 체계 구축	중기부금융위		'26.7
- 재기 소상공인에 개인회생·파산 연계지원 확대	중기부법원		'25~
2. 현장 종합지원 거점 운영 및 상담지원 강화			
-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(소진공) 통한 종합 안내·지원	중기부		'26.1
- AI 활용 소상공인 종합상담 고도화	중기부		'26.7
3.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 기회 확대			
1. 폐업 부담 획기적 완화 및 심리회복 지원			
-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강화	중기부	기재부	'26.1
- 폐업 이후 대출 상환 부담 완화	중기부		'25.下
- 폐업·재기 단계별 심리회복 지원 확대	중기부		'26.
2.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지원 강화			
- 폐업 후 취업 지원 강화	중기부	노동부	'25.9~
- 임금근로자 전환 인센티브 강화	중기부		'26
3. 준비된 재창업자 선별 강화 및 두터운 지원			
- 재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재기사업화 고도화	중기부		'26
- 재기사업화 선별된 소상공인에 두터운 지원	중기부		'26
- 성공한 재창업자의 도약을 위한 정책금융 강화	중기부		'26
4.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			
1. 폐업 충격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			
-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	중기부	노동부	'25.11
- 노란우산공제 부담 완화 및 혜택 강화	중기부	기재부	'25~
2. 재난·화재 등 예기치 못한 위험 대비 강화			
- 재난·화재 등 안전망 강화	중기부	행안부 기재부	'25.11~
3.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 확대			
- 성실상환 소상공인 정책금융 인센티브 강화	중기부		'25.7~
- 정책금융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 도입	중기부	금융위	'26
- 회수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의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	중기부		'26.3
- 영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바우처 신설	중기부		'26
-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지속	기재부	중기부	'25.下